

이승만 정권과 일본의 재군비 (1953~1955)

윤석정 _ 게이오(慶應義塾)대학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일본
- III. 일본의 재군비와 한미일 불가침 협정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1953년 6월부터 1955년 3월까지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을 고찰하고 이를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시대적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안전보장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면서 한국과 의견차를 보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일본 재군비가 정점에 달하면 향후 일본이 민족주의적 대외노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불가침 협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교섭전술,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 및 대일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승만은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고 결국 교섭은 중지되었다.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李承晩政權の対日外交—『日本問題』の視点から」의 내용 중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제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이승만 정권, 일본의 재군비,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

.....

I . 들어가며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전략의 거점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부흥과 재건을 추진하였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재군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에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을 종용하였다. 미국의 지원 속에서 1954년 7월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하였고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군사조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을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 시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교섭기간이었던 1953년 6월부터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한일외교 당국자간의 비공식 교섭이 진행되던 1955년 3월까지로 한다.

그 동안 기존연구에서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은 하나의 완결된 연구주제로서 다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연구내용의 일부로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일본의 재군비를 비판하는 한국의 반일담론을 언급하는 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일회담 연구에서는 반일 민족주의와 역사문제에 대한 법적, 감정적 대립의 산물로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일본의 재군비를

비판하는 한국의 언설을 서술하고 있다.¹⁾ 또한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대일외교를 고찰하는 연구에서는 한국은 역사적 경험에서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에 저항하며 탈식민주의 노선을 추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²⁾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인 일본보다 한국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재건하는 미국의 대일정책을 비판했다고 고찰하면서,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한국의 반일담론을 선택적으로 거론하고 있다.³⁾

이러한 기존연구의 경향에 대해 본고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점이다. 앞서 서술한대로 기존연구에서는 한국의 반일담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담론의 근간을 이루는 인식의 형성과정에는 분석이 부족하다. 실제로 이승만 정권이 일본 재군비의 진행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차원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담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점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일본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반일담론을 한국 특유의 대일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
- 1) 이승만 정권기의 한일회담을 분석하는 다수의 기존연구 가운데 본고의 취지에 맞는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高崎宗司, 『検証日韓会谈』, 岩波書店, 1996, 58쪽;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2015, 113~115쪽;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332~334쪽.
 - 2) 신옥희,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 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2016;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2001;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日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78-83쪽; 최희식,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2009.
 - 3) 신옥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47~70쪽;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제3호, 2010.

주목할 것은 1950년대를 되돌아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일본의 재군비가 현실화 되면서 전후 일본이 또 다시 군국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불신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태평양 전쟁 때 각인된 일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게 향후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였다.⁴⁾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은 지역 국가들이 일본과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일본이 자유진영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이는 이승만 정권의 대일 외교를 위와 같은 시대정세의 문맥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을 고찰해야함은 물론이다.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과 이승만 정권의 대일정책에 관해서는 이종원의 짧은 서술이 있다. 이종원은 이승만 정권의 대미, 대일 정책은 ‘초대된 제국’과 ‘이중 봉쇄’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위협뿐만 아니라 부활한 일본 군국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4)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프레드릭 도이지(Frederick W. Doidge) 외상은 존 덜레스(John F. Dulles) 특사와의 회담에서 “뉴질랜드에게 있어 일본은 악몽과 같은 존재이며 일본이 재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Memorandum by Mr. Robert A. Fearey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Notes on Conversation among Ambassador Dulles, Minister for External Affair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taffs”, February 17, 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hereafter cited as *FRUS*), 1951, Vol. 6, Part 1(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171. 또한 호주의 퍼시 스펀더(Percy C. Spender) 외상은 덜레스와의 회담에서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의 재군비를 제약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호주의 안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켈·샤ラー, 石川洋一 訳, 『「日米關係」とは何だったのか』, 草思社, 2004, 60쪽.

5) 덜레스는 도이지, 스펀더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팽창주의적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군사력은 자국주의가 아니라 집단안전보장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향해야 하며 이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Ibid. p.171.

있었고, 이에 대처하고 국가 건설을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이다.⁶⁾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이 역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차원에서 실증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밀어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누른다는 NATO식의 이중 봉쇄 개념을 적용한 나머지, 전술한대로 일본과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는 점이 잘 거론되지 않는다. 즉, 대일 봉쇄뿐만 아니라 관여의 측면까지 고려해서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생각했을 때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첫째, 이승만 정권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활하면 한국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을 지역안전보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득했다.

둘째, 일본의 재군비가 진전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대외전략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한미일 관계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의 제도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방위산업이 재개되고 제국군인 출신들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참가하면서 한국은 향후 일본이 민족주의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 하에 한국은 미국이 보장하는 한일 불가침 협정을 제안하면서 한일회담의 재

6) 이종원, 「전후 한일관계와 미국: 한미일 삼각관계의 변용과 지속」,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한일관계사 1965-2015- I 정치』, 역사공간, 2015, 173-176쪽.

개를 모색했다. 그러나 일본의 교섭전술,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 및 대일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승만은 불가침 협정 교섭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이승만 정권의 대일외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자료는 한미일의 외교 문서이다. 특히 한국 관련 자료의 많은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간 문서를 활용할 것이다. 주일한국대표부의 교환공문 문서철은 주일한국대표부의 정세 인식 및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한미일의 한일회담 관련 문서가 주로 이용되었는데 기록 내용상 외교 당국자간의 교섭이 주로 검토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간 문서를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한국 제1공화국 대일외교의 최종결정과정까지 시야를 넓혀 연구의 심화를 꾀할 것이다.

Ⅱ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일본

1.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미국

1953년 1월 한국전쟁의 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아이젠하워 정권이 출범하고 스탈린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한국전쟁은 본격적인 휴전 교섭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한국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휴전 반대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우여곡절 속에서 한미 간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1953년 6월 25일,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 다음날인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이승만과 로버트슨의 회담에서는 방위조약 체결, 휴전 이후의 정치회담,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⁷⁾

양자 간에 한일관계가 논의된 것은 로버트슨이 방한한 지 일주일인 되는 7월 3일이었다. 여기서 이승만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계심을 언급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승만은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 팽창주의의 부활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공산주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에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공산주의 위협, 내일의 일본 위협에 대한 안보협정이라는 것이었다.⁹⁾

로버트슨의 방한 이후 이승만은 일본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신하였다. 7월 11일, 이승만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앞 서한에서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 안보 체제의 근간은 한국의 독립과 부흥에 있다고 호소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이승만의 지역 구상에는 일본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반영되어 있었다. 같은 서한에서 이승만은 일본을 새로운 강대국으로 재건하면 아시아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거나 희생당하는 처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⁰⁾ 또한 이승만은 7월25일자 존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전략관이 궁극적으로 재등장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고 한미 간의 조약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¹¹⁾

7) 차상철(2001), 132~141쪽.

8) Convers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Mr. Robertson, July 3, 1953,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hereafter cited as Rhee Papers), 우남B49, 우남B-380-028.

9) Editorial Note, *FRUS*, 1952-1954, Vol. 15, Part 2(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1192.

10)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to President Eisenhower, July 11, 1953,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1369.

기존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이와 같은 이승만의 대미외교에는 한일회담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교섭전술의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전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로서 이승만이 향후 일본이 한국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일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장하도록 촉구하였다. 7월 26일 이승만은 이전에 텔레스가 “휴전 조약이 파기되어 한국이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을 당한다면, 미국에 의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군사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똑같은 원칙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외부세력에 의한 공격에도 확대 적용될 것을 요구하였다.¹²⁾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대미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로버트슨은 텔레스 방한을 준비하면서 ‘일본과 한국에 초점을 맞춘 극동 정세’라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미국의 대일정책과 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위상에 대해 이승만의 이해를 구하고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이 취해야 할 대응을 텔레스에게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¹³⁾

먼저 로버트슨은 이승만이 보낸 7월 11일, 25일 서한을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아시아의 전략적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전략관이 다시

1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5,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1438.

12)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6,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1440.

13)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Robert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Japan and Korea”, July 30, 1953, no. 665, *FRUS* 1952-1954, Vol. 14, Part 2(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1464.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로버트슨은 이러한 한국의 주장에는 식민지 해방 이후 한일 간의 긴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승만은 미국에게 (1)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의 육, 해, 공군을 강화할 것, (2) 미국의 대한원조의 일부로서 한국에 일본제 품을 유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미국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⁴⁾

이러한 이승만의 반일외교에 대해 로버트슨은 일정부분 이해를 표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세계정세를 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것은 로버트슨이 권위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 일본의 부활이라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이다. 로버트슨은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일본은 한국과 자유진영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자유진영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또 다시 외교적으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일본을 지역안전보장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미국은 한국 및 자유진영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 군사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대처해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떠한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⁵⁾

로버트슨의 주장은 일본의 재군비가 현실화 되면서 전후 일본이 또 다시 군국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불신이 만연하던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경고하는 이승만의 주장을 한국 특유의 반일담론이라는 시각을 넘어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시대적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

14) Ibid., pp.1464~1465.

15) Ibid., pp.1465~1466.

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주장에 근거하여 로버트슨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확고한 생각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간의 그 어떠한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한일 양국 정부에게 현재의 긴장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바람을 피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향후 일본이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이면서 억압적인 수단을 다시 꺼내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현재의 건전하고 중도적인 일본인들에게 한국 및 자유진영에 그들의 선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¹⁶⁾

즉, 로버트슨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이 일본을 지역안정보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안정보장을 확보하도록 설득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 후에 로버트슨은 이승만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재건하는 미국의 정책이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불평한다면 미국이 한국에게도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일본의 재군비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일본 방어와 치안유지에 한정된다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¹⁷⁾

2. 이승만 · 덜레스 회담과 일본

8월 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교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덜레스와

16) Ibid., p.1466.

17) Ibid., pp.1466~1467.

이승만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휴전 후의 정치회담과 통일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대일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인들은 소련보다 일본을 더 두려워한다면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일본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있는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야심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¹⁸⁾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 덜레스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덜레스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방침을 밝혔다. 덜레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소련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을 보호하며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서 재부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덜레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며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기지를 주둔할 것이며 한국과도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수립하도록 이승만을 설득했다.¹⁹⁾ 이러한 설득의 근거에는 “미일안보조약에 충실한 일본과 다른 주변국들의 협력관계야말로 일본 침략의 재현을 방지하는 최대의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는 덜레스의 대일 전략이 있었다.²⁰⁾

덜레스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경계심은

1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Young), “First Meeting between President Rhee and Secretary Dulles”, August 5, 1953,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p.1472~1473.

19) *Ibid.*

20) John Foster Dulles,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30-2(January 1952), p.184.

불식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승만은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승만은 존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과 엘리스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대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을 증강한다면 아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이승만의 반일 외교에 직면한 덜레스는 다시 한 번 설득에 나섰다. 1954년 3월 15일 덜레스는 브릭스에게 보낸 전보에서 일본은 군사적으로 무력하며 자국방위에 핵심적인 부분을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육상 자위대의 증강계획은 일정 수준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이승만에게 알리고 한국이 자유진영의 안전을 위해 대일관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도록 지시하였다.²²⁾

Ⅲ. 일본의 재군비와 한미일 불가침 협정

1. 일본의 재군비와 한국

앞서 서술했듯이 이승만 정권은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재건되면 한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일본 재군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겠다.

먼저 일본방위산업이 재개된 것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21) Respons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March 10, 1954, Rhee Papers, 우남 B-301-064.

22) 「덜레스 국무장관, 李承晩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견해 전달」, 국사편찬위원회(편),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2(1952-1955): 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국사편찬위원회, 2007, 268-270쪽.

한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방위산업이 재건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김용식 주일한국대표부 공사는 1954년 1월 21일자 리포트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점령기에는 금지되어 있던 일본의 병기제조를 허가했고, 일본은 병기 제조 산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경제도 재건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은 자국방위를 위해서 병기를 제조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²³⁾ 주일한국대표부는 일본의 무기제조능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었다. 1월 28일 김용식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과 비등한 수준의 병기제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무기 제조의 자체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⁴⁾ 주일한국대표부는 일본이 재군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일한국대표부는 일본 재군비의 인적 구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김용식은 3월 4일자 이승만 앞 공문에서 일본국회에서 제국군인 출신들에게도 국방회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김용식은 일본의 국방회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데, 참여 멤버의 자격 제한을 폐지하면서 제국군인 출신들이 요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²⁵⁾ 특

23) Correspondence; Political report from Yong Shik Kim to Office of President, January 21,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1-119.

24) Correspondence; Political report from Yong Shik Kim to Office of the President, January 28,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1-110.

25)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President, March 4,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1-067. 그러나 제국군인 출신들이 국방회의에 참여하는 문제는 법안 제출과정에서 일본 국내정치적 상황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다. 요시다 내각이 퇴진하고 하토야마 내각이 국방회의 구성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보수합동이 진행되면서 제국군인 출신들이 핵심적인 방위정책에 복귀하는 것에 소극적인 자유당의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1955년 7월 법안은 국방회의에 제국군인 출신들 참여 조항이 삭제된 채 중의원을 통과하게 된다. 국방회의 창설에 관한 일본 국내정치 역학에 관해

히 주일한국대표부는 제국군인 출신들이 일본 방위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김용식은 6월 24일자 이승만 앞 공문에서 일본의 보안대가 자위대로 개편되면서 제국군인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점을 들어 향후 일본의 문민통제가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재군비가 미국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 예로 3월 8일에 체결된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이하 미일 MSA협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들 수 있다.²⁷⁾ 김용식은 미일 MSA협정의 의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했다. (1) 일본이 육, 해, 공군을 유지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대규모 방위산업이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 (2) 일본은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공산 중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을 공언했다는 것이다. 김용식은 미일 MSA협정에 의해 일본은 경제지원을 획득하고 재군비에 임하게 되면서 미일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일본에 주재하는 아시아 국가 사절들은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승만에게 보고했다.²⁸⁾

한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재건되는 일본의 방위력이 일본방위를 넘어 지역안전보장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18일에 작성된 김용식의 보고서는 미일 MSA협정과의 연관 속에서 일본 재군비가 차지하는 의의

서는 中島信吾, 『戦後日本の防衛政策—「吉田路線」をめぐる政治・外交・軍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 2章.

26)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President, June 24,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2-020.

27) MSA는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을 토대로 하는 원조협정을 뜻한다. 1951년에 성립된 상호안전보장법은 군사원조를 통해 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는데,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서 원조 대상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정에 의한 군사적 의무를 이행하고 자국과 자유세계의 방위력 증진에 기여할 것을 내걸고 있다. 外岡秀俊 その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朝日新聞社, 2001, 104쪽.

28)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President, March 11,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1-060.

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협정에 “일본국 정부는……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 자원, 시설 및 일반적 경제조건이 용납하는 한 자국의 방위력 및 자유세계의 방위력 발전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자국의 방위능력 증강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며”(밑줄은 원문)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의 승인 하에 자유진영의 집단방위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²⁹⁾

김용식은 미국의 지원과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일본이 재군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은 7월 8일자 이승만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일본은 아이젠하워 정권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군비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고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재군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대외전략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던 점이다. 김용식은 일본의 거대산업과 자본이 급속하게 재집중화 되면서 재벌의 부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재군비 수준이 정점에 다다르면 민족주의적 경향이 싹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³⁰⁾

주일한국대표부의 김용식은 일본의 재군비 문제에 대해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중화민국을 들 수 있다. 이승만 정권과 중화민국은 같은 반공진영이었지만 대일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마찰을 겪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일본의 재군비

29) Correspondence; Political report from Yong Shik Kim to Office of the President, March 18,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1-058. 김용식은 본고의 문구가 협정의 제4조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제8조의 일부이다. 미일 MSA협정의 전문은 데이터베이스 『世界と日本』, 「MSA協定(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相互防衛援助協定)」, <http://worldjpn.grips.ac.jp> (검색일: 2017.4.27).

30)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July 8,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3-112.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월 26일 김용식은 동현광(董顯光) 주일대만대사와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동현광은 일본의 재군비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방위예산을 늘리기 어렵고 재군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현광은 앞으로 50년간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이 일본에 군을 주둔하고 있는 한 일본의 재군비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용식은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져있지만 재군비가 진전되는 한 일본의 공격적인 성향이 표출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반박하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집단안보체제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³¹⁾

2. 한미일 불가침협정 구상의 등장

주일한국대표부의 김용식은 외신기자, 주일 외교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일관계에 관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대일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었다.

1954년 9월 14일에 있었던 혈과의 접촉도 위와 같은 외교활동의 일환이었다. 먼저 한일회담이 화제에 올랐다. 김용식은 일본의 교섭 자세를 비판하고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구보타 발언을 철회하고 역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혈은 요시다 정권은 국내 정치 사정상 역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하였고

31)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August 26,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3-060.

이를 준수할 뜻을 밝힌다면 역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혈의 주장에 대해 김용식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역청구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³²⁾

한일회담에 이어 두 사람은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김용식은 한국인들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의 주장을 들은 혈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혈은 한국이 원한다면 한미일 간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일의 삼자협정을 제안한 것이다.³³⁾

약 한 달 이후 김용식과 혈은 한미일 삼자협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였다. 김용식이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혈은 한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한미일 간의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이 집단안보체제의 틀에서 삼자협정을 제안한 점이다. 혈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해서 태평양판 NATO를 창설하여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통합사령부의 지휘하에 뒀으로써 회원국 간에 침략적 국가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⁴⁾. 즉, 혈은 일본의 재군비를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제도적 틀 속에 정립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 확보하라고 제안한 것이었다. 집단안보의 제도적 틀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혈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용식은 혈의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혈의 구상에 의하

32) Political Report;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September 16, 1954, Rhee Papers, 우남B37, 우남B-303-019.

33) Ibid.

34)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Mr. President, October 14, 1954,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4-145.

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NATO형식이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적용된다면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것이었다. 김용식은 러일 전쟁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영토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혈은 대상국가의 동의 없이 군을 파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조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용식은 동의하지 않았다. 김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재군비가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명확한 보장이기 때문이었다.³⁵⁾ 양자 간의 대화는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의견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한국이 삼자협정 구상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혈의 삼자협정 구상에 대해서 일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조치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0월 20일 이승만은 김용식에게 삼자협정의 구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참가국 중에 어느 한 국가가 침략적 행위를 하면 다른 두 국가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는 구절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³⁶⁾

삼자협정에 대한 이승만의 관심은 한국 대일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는 10월 5일자 이승만 앞 서한에서 아이젠하워에게 한일문제해결의 원칙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거론하자고 제안하였다. (1) 일본이 한국 영토와 재산에 대한 모든 요구를 완전히 포기할 의사를 공개 표명할 것, (2) 일본에 대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방향의 원조 계획으로 한국경제를 발전시

35) Ibid.

36) Correspondence from Mr. President to Yong Shik Kim, October 20, 1954,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4-137.

켜야 한다는 것, (3) 어업문제는 한국의 권리보호를 원칙으로 타결할 것, (4) 한일이 무기의 종류와 수량에서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일본에 의하고 어떠한 형태의 지배에 대해 한국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 (5)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한일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올리버는 한국 통일문제와 중일 무역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상의 사항들이 성취되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동남아 조약 기구 문제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³⁷⁾

(1)번, (3)번은 한일회담의 청구권 교섭과 어업교섭에 해당되고 (2)번 항목은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한 요구이다. (4)번 항목과 ‘적절한 안전장치’ 문구가 삼자협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올리버의 제안은 한국이 일본에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일본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냉전의 전초국가로서 일본과의 반공지역협력을 모색한다는 큰 틀의 구상 속에서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의 제도화가 검토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³⁸⁾

이렇게 한국 정부 내에서 삼자협정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김용식은 협정제안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김용식은 10월 29일자 이승만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한국 쪽에서 능숙하게 접근한다면 미국이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정에 대해서는 체결국 중에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벌이면 나머지 국가들이 침략적 행위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며 정리하자면 ‘3국 불가침’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7) Letter regarding Korean diplomatic matters, October 5, 1954, Rhee Papers, 우남 B20, 우남B-174-002.

38) 앞서 혈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해서 태평양판 NATO를 창설하여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통합사령부의 지휘 하에 묶으로써 회원국 간에 침략적 국가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올리버의 구상은 이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해두겠다. 전술한 대로 혈의 구상은 집단안보의 제도적 틀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올리버는 (4)번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안전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할 생각을 밝히며,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보기 전까지 일본은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³⁹⁾

11월 30일 김용식은 혈과의 회답에서 3국 불가침 협정 구상을 꺼내 들었다. 김용식은 미국은 더 이상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마찰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을 잠재적 침략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다. 혈이 한일 간의 현안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불가침 협정에 대해 교섭할 것을 제안하자, 김용식은 불가침 협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침략을 감시한다는 미국의 보장이 제공될 때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의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한일 간의 현안도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었다.⁴⁰⁾

김용식의 보고를 받은 이승만은 불가침협정 교섭을 추진할 방침을 굳혔다. 이승만은 12월 10일자로 김용식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이 공격적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협정이 체결된다면 일본에 대한 불신과 일본의 침략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⁴¹⁾

3. 불가침 협정 교섭 개시

한편 일본에서는 요시다 총리가 퇴진하고 1954년 12월 하토야마 내

39)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Mr. President, October 29, 1954,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4-112.

40)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Mr. President, December 3, 1954,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4-057.

41) Correspondence from Mr. President to Yong Shik Kim, December 10, 1954,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4-045.

각이 수립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朗) 총리는 지지 부진한 한일교섭을 타개하고자 한국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신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김용식과 다니 마사유키(谷正之) 외무차관이 비공식 교섭에 들어갔다.

김용식·다니 회담을 계기로 불가침 협정구상이 한일 외교당국자 간에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1955년 1월29일 김용식은 다니와의 1차 회담에서 한국인들은 과거 일본의 행동 때문에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국의 대일불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니는 한일관계를 독일과 프랑스 관계에 비유하면서 협정 구상에 동의를 표했다.⁴²⁾

불가침 협정 구상에 동의한 이후, 김용식과 다니는 미국의 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용식은 다니와의 2차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니는 미국이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표했다.⁴³⁾

이후 다니는 불가침 협정의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다니는 존 앨리슨(John M. Allison) 주일대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불가침을 선언하고 대일평화조약과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⁴⁴⁾ 다니가 준비한 초안은 다음과 같다.

42) Report from Yong Shik Kim to President, "Detailed Report on My Finding", February 4,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116. 「谷大使·金公使會談の件(第一會)日韓關係, 米國仲介, 請求權, 漁業問題, 修好條約, 竹島問題他」, 淺野豊美 その他編, 『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第2期 第1卷, 現代史出版會, 2012, 15~16쪽.

43) Ibid.

44) 「金溶植 주일공사, 미국이 보장해주는 한일간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국사편찬위원회(2007), 491~492쪽.

1. 3국은 자국이 관계하는 어떠한 국제분쟁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결하며 3국의 국제 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그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유엔 목적과 배치되는 방식에 의한 것도 삼갈 것을 약속한다.
2. 3국은 극동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발전 및 사회 복리의 촉진이 이 지역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를 인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다.⁴⁵⁾

한편 김용식은 다니의 초안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용식이 준비한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체약국은 자국이 관계하는 어떠한 국제분쟁도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결하며 3국의 국제 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그 어떠한 체약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경제적 안정, 유엔 목적과 배치되는 방식에 의한 것도 삼갈 것을 약속한다.
2. 제1조에 대해 체약국 중 한 국가가 노골적인 위반을 했을 경우, 제3자는 그 위반에 직면한 국가를 즉시 원조할 의무를 약속하는 것에 동의한다.⁴⁶⁾

45) 「日本国, アメリカ合衆国及び大韓民国の共同宣言(英文)」, 浅野豊美(2012), 21쪽. 제1조는 대일평화조약5조(a)의 (i)항과 (ii)항을 조합한 문구이다.

46) “Tripartite Non-Aggression Pact”, February 18,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 B-305-092.

다니의 초안과 비교해 봤을 때 김용식의 초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1조의 하단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제2조에 위약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용식은 침략 행위의 범위를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위약 상황에 대한 미국의 보장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김용식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의 취지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 (1)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감시하는 것, (2) 일본의 극우세력에게 팽창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 (3) 미국 국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 한국의 영토보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⁴⁷⁾

한국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불가침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었다. 2월 24일 이승만은 김용식에게 초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니의 초안에 관해 2조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규정한 문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과의 교류에서 한국 사회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용식 초안에 관해 1조에서 “경제적 안정, 유엔 목적과 배치되는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산주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동서진영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유엔의 결정에 구속되면 한국에게 있어 위협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⁴⁸⁾

2월 28일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김용식은 다니의 초안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제1조에서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이어 “경제적 안정”을 추가하고 유엔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

47)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February 18,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96. 초안의 제2조는 1925년에 체결된 로카르노 조약을 참고한 것이었다.

48) Correspondenc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February 24,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94.

다. 둘째, 제2조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를 “상호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존중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⁴⁹⁾

3월 9일 일본은 김용식의 수정제안에 대해 역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조에서 “경제적 안정”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유엔 관련 부분을 재삽입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조에서 “상호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다.⁵⁰⁾ 경제 주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배려하면서 한국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4. 위약조항과 협정 형식을 둘러싼 교섭

이처럼 불가침 협정교섭이 진행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 사회에 대한 상호존중의 문구를 삽입하는 데 동의하는 등 몇 가지 쟁점 사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협정 형식과 미국의 보장 문제였다. 일본은 공동선언 형식을 제안했고 위약조항은 명시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 국내 정치상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기하라 아라타(杉原荒太) 참의원은 주일한국대표부 유태하 참사관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일본 민주당에서는 일본의 헌법이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침 구상 자체가 유치하다는 이유로 협정에

49) 「谷大使・金公使會談(第五回)(日米韓三国共同宣言の修正案)」, 淺野(2012), 25~26쪽.

50) 「日韓會談の経緯(その二)(昭和二十九年十二月一三十年十月)」, 淺野(2012), 71쪽. 문서상으로 확인은 되지 않으나 일본이 유엔 조항의 재삽입을 요구한 배경에는 일본의 유엔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은 1956년 12월이지만 대일평화조약에서 유엔 가입을 신청하고 유엔 현장을 준수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외적으로 유엔중시를 표방하고 있었다.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스키하라는 이러한 내부사정을 설명한 후 조약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선언 형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감시를 받는다고 국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참가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에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⁵¹⁾

그렇다면 미국은 한일의 불가침 협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엘리슨은 김용식과의 회담에서 국무성의 입장으로서 공동선언 형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⁵²⁾ 미국이 공동선언 형식을 제안한 데에는 승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주일미대사관의 리처드 램브(Richard H. Lamb) 서기관은 유태하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조약 형태로 대처할 경우 미국 상원 3분의 2가 동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공동선언 형식이라고 말했다.⁵³⁾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미국은 불가침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국무성은 주일미대사관에 보낸 전보에서 불가침 협정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1) 일본은 이미 대일평화조약에서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신상태를 내포하는 불가침 협정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 지역의 상호방위조약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2) 이미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침 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3) 일본이 대일 평화조약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선언이 적절하

51) Report from Tai Ha Yiu, "with Sugihara and Fujita", March 2, 1955, Rhee Papers, 우남B40, 우남B-321-078.

52)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February 25,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86.

53) Report from Tai Ha Yiu, "Lunch with Lamb", February 24, 1955, Rhee Papers, 우남B40, 우남B-321-137.

다는 것, (4) 한일 간의 우호친선,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는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것, (5) 만약 미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선언이나 외교 당국자간의 문서 형식을 염두에 두고 유엔 헌장, 대일평화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의 문맥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표기한다는 것이었다.⁵⁴⁾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2월 28일 김용식은 다니와의 회담에서 위약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니는 위약조항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용식은 협정의 성격상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제3국이 즉지 지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김용식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니는 위약에 관한 규정은 합의 의사록 형태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여 타협을 꾀했다.⁵⁵⁾ 김용식은 위약 조항이 선언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니의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⁵⁶⁾

다니와 김용식은 협정 형식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니는 미국도 조약 형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선언 형식을 수용하도록 촉구하였다. 김용식은 다니의 설득에 납득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용식은 이승만에게 보낸 공문에서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 선언도 조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형식상 미국 상원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하면서 선언 형식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⁵⁷⁾

54) 「미국, 한국이 미국의 보장을 요구한 한일불가침조약 필요성 부인」, 국사편찬위원회, 2007, 493~494쪽.

55)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March 4,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69.

56)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March 4,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70.

57) 주55)와 같음.

그러나 이승만은 외교당국자간의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협정의 형식을 문제 삼았다. 3월 9일 이승만은 김용식에게 위약조항의 삽입이 어려울 경우 합의 의사록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선언 형식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동선언으로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⁸⁾

이처럼 조약 형식을 고수하는 이승만에 대해 김용식은 설득에 나섰다. 김용식은 문구에 관해 약간의 교섭이 필요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스스로 군사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가침 협정 혹은 선언만으로 한국의 영토를 지킬 수 없지만, 국제적인 의무에 일본을 구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일이 조약형식을 수용하도록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본심은 선언 형식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⁵⁹⁾

김용식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이승만은 불가침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 이승만은 불가침 협정이 한일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이승만은 김용식에게 일본이 불가침 협정을 한일회담의 현안타결을 위한 사전 단계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⁶⁰⁾ 이승만은 한일회담의 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불가침 협정을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여 한국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가침 협정에 대한 이승만의 회의적인 시선에는 미국 요인도 작용

58) Correspondenc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March 9,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66.

59) Correspondence from Yong Shik Kim to Syngman Rhee, March 18,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46.

60) Correspondenc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March 31,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29.

하고 있었다. 3월 24일 이승만은 김용식에게 미국이 불가침 협정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한국이 애처롭게 부탁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이 조약 형식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⁶¹⁾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의 회의적인 시선에는 일본을 냉전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3월 31일 이승만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가침 협정에서 미국이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승만은 불가침 협정 교섭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⁶²⁾

IV. 결론

기존연구에서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은 하나의 완결된 연구주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시대적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승만 정권과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해 극심한 의견 차이를 노정하였다. 이승만은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한국의

61) Correspondenc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March 24, 1955,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05-038.

62) 주60)과 같음. 이후 한일 간에 불가침 협정이 다시 논의된 것은 1956년 4월경의 일이다.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외상은 김용식과의 회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한미일 불가침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본의 교섭전술과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 등 55년 3월경과 동일한 이유로 불가침 공동선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김용식에게 지시했다. Correspondence from President to Yong Shik Kim, April 19, 1956, Rhee Papers, 우남B38, 우남B-310-074. 이후 이승만 정권기의 한일관계에서 불가침 협정은 더 이상 교섭의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안전보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미국이 향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한국이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방위산업이 재개되고 제국군인 출신들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재군비를 마친 일본이 민족주의적 대외노선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 한국은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불가침 협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교섭전술,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 및 대일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승만은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교섭은 중지되었다.

이상의 고찰은 이승만 정권의 대일외교가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방위력 증강에 나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이 한국의 대일인식과 오늘날의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4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5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6월 6일

참고문헌

〈1차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2(1952~1955): 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국사편찬위원회, 2007.
- FRUS, 1951, Vol. 6, Part 1(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FRUS, 1952-1954, Vol. 14, Part 2(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 FRUS, 1952-1954, Vol. 15, Part 2(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 Rhee Papers, 우남B20.
- Rhee Papers, 우남B37.
- Rhee Papers, 우남B38.
- Rhee Papers, 우남B40.
- Rhee Papers, 우남B49.
- 淺野豊美 その他 編,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2期 第1卷, 現代史出版会, 2012.

〈2차 자료〉

- 이종원, 「전후 한일관계와 미국: 한미일 삼각관계의 변용과 지속」,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한일관계사 1965-2015 - I 정치』, 역사공간, 2015.
-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제3호, 2010.
- 신옥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미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신옥희,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2016.
-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2001.

- 최희식,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3호.
- John Foster Dulles,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30-2(January 1952).
-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2015.
- 外岡秀俊 その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朝日新聞社, 2001.
- 高崎宗司, 『検証日韓会談』, 岩波書店, 1996.
- データベース 『世界と日本』, 「MSA協定(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防衛援助協定)」, <http://worldjpn.grips.ac.jp> (검색일: 2017.4.27).
- 中島信吾, 『戦後日本の防衛政策—「吉田路線」をめぐる政治・外交・軍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6.
- 마이클·샤ラー, 石川洋一 訳, 『「日米関係」とは何だったのか』, 草思社, 2004.
-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Abstract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nd Japan's Rearmament(1953~1955)

Suk-Jung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Japan's rearmament in the context of security against Japan. There is critical dispute between ROK and U.S. about security against Japan. Syngman Rhee demanded definite assurance from the U.S. of safeguarding ROK against Japanese aggression. To Syngman Rhee's argument, U.S. convinced ROK to achieve security against Japan through a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Syngman Rhee administration predicted that if Japan's rearmament was reaching peak, Japanese nationalism would revive. Based on worst case scenario about Japan's rearmament, ROK suggested ROK-U.S.-Japan tripartite non-aggression pact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security against Japan. However, for Japan's negotiation tactics, U.S.' passiveness and policy toward Japan, Syngman Rhee became skeptical about non-aggression pact and finally the negotiation was failed.

Key words

ROK-Japan relations, ROK-U.S. relations, Syngman Rhee Administration,
Japan's Rearmament, Security against Japan